

설 이후 정국 대치가 팔라진다...재난금·언론개혁·김명수

재보선 앞둔 여야, 연휴 뒤 정국 주도권 다툼 치열 與,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언론개혁도 핵심 野, '언론탄압' 강력 저지 예고...김명수 사퇴 총공세

나흘 간의 설 연휴가 14일 끝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니 대선급' 4·7 재보궐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 기간 국회를 떠나 짧은 휴식을 가진 여야는 저마다 확인한 설 민심을 명분으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직후 재난지원금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에 합의한 상태로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확정키로 한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급 방식, 규모, 시기는 설 연휴 지난 뒤에 빠른 속도로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를 결

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 없이 취약계층, 피해계층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서둘러야 한다는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맞춤형과 전국민 병행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의 맞춤형·전국민 병행 지원에 공개 반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 중대본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선거용 돈풀기'라는 야당의 대어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더해 정부 설득이라는 과제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지나 당정 갈등이 자칫 문재인 정부 레임덕 프레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

어 더욱 부담이다. 민주당은 일단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모두 반영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되 정부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언론개혁 입법을 놓고도 임시국회에서 거칠게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 뽑기 위해 논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쟁점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는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언론에 대해서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별도 법안으로 규율해 왔지만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

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서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쟁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언론에 대해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줘서 언론 위축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지 않게 조급하게 하려는 지남득이 안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쟁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안을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제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이 검찰개혁에 이어 다음 개혁 과제로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운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미디어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승래 최고위원은 "언론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이라며 "허위



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한다. 정상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공방도 설 이후 정국을 달굴 재료다.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맞대응해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을 파고들며 연일 사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다"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권력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벗겨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을 불러세워 거짓 해명 논란과 국회 인준 로비 의혹 등에 총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녹취 자체가 '불법 도청'이라는 문제 제기로 책임을 돌리며 김 대법원장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부탁을 받아 사표를 수리했다면 탄핵 회피 심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서울취재부 김윤호 기자

이상호 "민주당답지 않아" vs 박영선 "민주당답단 게 뭐냐"



더불어민주당 이상호(왼쪽),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 그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청년창업 및 일자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상호 후보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우 후보는 "박 후보가 발표한 공약들은 구성성이 결여된 추상적 영역에 머물러 있어 오늘부터 날카롭

게 정책역량 검증에 시작하겠다"며 날선 정책검증을 다짐했다.

우 후보는 "21분 도시 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21분 도시, 수직정원 등 한정된 분야 외에 이렇다 할 방안들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는 기자들에게 입장을 묻는 데 "민주당답다는 게 무슨 말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우리는 집권 정당이라는 것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맞박아쳤다.

또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TV 토론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

與,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지급 공식화

"정부와 재난지원금 편성 본격 추진...맞춤형부터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을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

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당정 갈등 국면의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에 들어가고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뉴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